강진군, 벼 육묘 구입권 지급… 쌀 생산 비용 절감

부족한 일손 해소… 6297매 배부 면적에 차등…유효기간 6월21일

강진군이 벼 육묘 비용 지원 구입권 6297매 배부를 시작했다. 육묘 비용 지원을 통해 쌀 생산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벼 육묘 비용 구입권을 지난달 28일부터 읍면에 배부하고 있다.

군은 국비로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 벼 재배면적 및 간척지와 조건 미충족 농지를 포함해 전략작물직불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등 총 8982ha, 6297농가에 대해 군비 13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상토구입권을 제작했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지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이면 1㎡당 15.5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은 없으며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공무원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구입권은 타인 사용이 불가하도록 배부지역 일련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해당 보조금액, 위·변조 방지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유효기간은 6월21일까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벼 육묘 비용 지원이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영농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농사는 못자리 준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성껏 잘 길러서 올해도 풍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탄력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완도군은 2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예정보다 4개월여 앞당겨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부지(381㏊)에 국비 147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난대수목원이 조성될 경우 연간 수십만명의 방문객과 1조원 이상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여명 이상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를 갖고 사업의 추진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목원의 역할과 함께 레이크 가든 센터, 모노레일, 전망대, 트리탑 데크 로드, 전시 온실 등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에 착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큰 축을 맡을 것이다"며 "해양치유 사업과 연계해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소외계층 대상 주거개선 활동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대장 백홍상)가 지난 1일 장애인세대와 독거노인세대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2일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대상 가구들은 주방 후드 고장, 싱크대 노후화, 베란다 타일 파손, 현관문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방치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복지기동대원들은 해당 불편 신고를 접수하고 듣고 싱크대 수리 등 각종 가구의 수리 수선을 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최상필 청계면장은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이웃에게 복지기동대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지기동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1일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가 독거노인세대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해남군, 대형산불 특별대책 편성… 기동단속반 운영

유관기관 상시 협력체계 유지

해남군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주까지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며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공무원 기동단속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개조, 55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와 함께 읍면 순회를 통해 등산로 등 취약지역 산불예방의 순찰과 계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 30분내 현장도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매우 건조한 시기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해무익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무안군, 30일까지 운영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자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진영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신고 기간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하여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완도군은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만~205만원/ha)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0.5㏊ 이하)에는 소농 직불금(13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발급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예되었던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 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정 수급액에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9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대상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해양쓰레기↓… 환경 예산 절감

해남군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새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 예산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폐스티로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 원인이자 해안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용해 지금까지 103만개에 이르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1일 1000~1200개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해 250㎏ 압축성형물로 새활용하게 된다. 압축성형물은 재활용품 1차 공정을 통해 사진액자, 건축자재 등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압축성형물을 판매한 세외수입 3900만원은 물론 위탁처리비용 28억85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시간당 폐부표 500개를 처리, 100㎏의 압축성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감용기를 신규 구입해 폐스티로폼 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규 감용기는 1일 6시간 작업시 3000여개, 기존 감용기 처리 용량의 2배를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으로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